

# 광주시, 지역혁신프로젝트로 일자리 만든다

## 市-지방고용노동청-광주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실·국 협업 통해 회의 체계 갖춰 일자리 집중

광주시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이었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시장 간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현안 토론회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부 조직 추진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추진 업무가 일부 실·과로 나뉘져 있는 만큼 추진상황 점검 등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회의 체계를 갖추는 부문이 제안됐다. 조직 개편이 아닌 협의회 등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이날 현안 토론회 주제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지만, 다른 현안들이 많아 이를 챙기는데 일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현안들이 모두 정리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며 "정규 조직 개편이 아닌 관련 실·국 협업을 통한 회의 체계를 갖추는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관련 기관과의 약정 등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해 이른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시장과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상열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들 기관은 광주 고용시장의 문제점인 제조업 일자리 부족, 청년층 취업자 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매칭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지도·점검을 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일자리사업 발굴, 지역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 지역대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이들 기관과 함께 추진할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회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 ▲지역의 위기산업 극복을 통한 고용 확대 ▲고용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유도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이다.

지역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에너지산업과 해외 생산라인 이전 등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가전 산업에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가 올해 추진 중인 신규 인력양성, 재직자 향상훈련, 창업지원,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과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연계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선정으로 광주시가 지원받는 국비는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7억5000만원이다.

앞으로 2년간 사업 재설계로 약 100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윤장현 시장은 "이번 약정으로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고용 사각지대 해소,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모든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연구팀은 멕시코 시장 개척을 통한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활용, 이라크의 중소기업 공동생산과 향만 물동량 확대, 아프리카에 스마트 농업 비즈니스 모델 수출, 프랑스와 수소차 기술교류 협력 촉진, 몽골의 대수입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순방국과의 자매결연·우호 교류 실적이 없으며 전남은 여수시가 멕시코와 유일하게 자매결연을 했고 순천시가 프랑스 지역, 담양군이 몽골 지역과 우호 교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한사람이라도 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에서 규모 6.2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25일 아마트리체에서 무너진 건물의 매몰자를 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도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 공유 대책 필요”

### 광주전남연구원 제안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른 국가적 경제성장과 공유하도록 지역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 책임연구위원과 임형섭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광전리더스 인포'(Info)에 실은 연구보고서에서 "광주·전남의 강점을 고려해 해외순방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교류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 까지 4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멕시코·이란·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프랑스·몽골 등 7개 국가와 경제 분야 포함, 모두 22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에너지·농업·보건 의료·정보통신 기술(ICT) 등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규모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2011~2015년 광주·전남과 순방국의 수출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는 프랑스 상대 수입이 크게 늘었고 수출은 약간 감소했다. 전남은 프랑스와 멕시코 상대 수입이 늘었지만 이란·몽골 상대 수입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순방국과의 자매결연·우호 교류 실적이 없으며 전남은 여수시가 멕시코와 유일하게 자매결연을 했고 순천시가 프랑스 지역, 담양군이 몽골 지역과 우호 교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멕시코 시장 개척을 통한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활용, 이라크의 중소기업 공동생산과 향만 물동량 확대, 아프리카에 스마트 농업 비즈니스 모델 수출, 프랑스와 수소차 기술교류 협력 촉진, 몽골의 대수입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순방국과의 자매결연·우호 교류 실적이 없으며 전남은 여수시가 멕시코와 유일하게 자매결연을 했고 순천시가 프랑스 지역, 담양군이 몽골 지역과 우호 교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광주 상무공원에 안중근 의사 동상 세운다

### 민주평통 광주청년회 추진

광주 상무 시민공원에 안중근(安重根·1879~1910) 의사 동상이 세워진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광주지역 청년위원회(회장 양승근·48)가 중심이 돼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이 추진중이다.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산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로와 세로 각 3m, 높이 3.3m 규모, 청동상으로 제작된다. 7000여만원에 달하는 제작비용 등은 청년위원회 회장 양승근(49)씨의 재능기부가 더해졌다.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 사업은 2014년 말부터 추진됐으며, 제막식은 오는 10월 26일 안 의사 거사일에 맞춰 있을 예정이다.

양승근 청년위원장은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숭고한 선열의 얼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안 의사 동상 건립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광주에는 북구 중외공원에 안 의사 동상이 있으며 광주공원과 농성광장에 의병장 심남일 순절비, 죽봉 김태원 동상이 세워져 있다.

광주시는 동상 건립에 앞서 다음 달 1일 광주보훈관에서 시민과 관련 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광주 상무 시민공원에 세워질 안중근 의사 동상. /연합뉴스

공청회를 연다.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한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일제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고 체포돼 위순 감옥에 수감됐다. 일제의 사형선고를 받고 1910년 3월 26일 순국했다. 올해는 안 의사 순국 106주기가 되는 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위안부 생존자 1억, 사망자 2000만 원

### 정부 "명예와 존엄 회복·상처 치유 현금 지급"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이하 1인당), 사망자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111억 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0억 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외교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현금 제공 방식에 대해 화해·치유 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도시 이전기관의 역할을 활용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해외진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력산업 분야 투자 유치와 수출 구조 다변화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현금 지급과 별개로 추진될 재단의 사업은 작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곧 재단 규모로 10억 엔을 송금하게 될 것"이라며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성격과 관련, "일본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에서 10억 엔을 쓰는 명목은 '국제기관 등에 대한 기출금'이기에, 공적개발원조(ODA)나 경험자금 등과는 다른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금의 성격이 '배상금'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